

개량백신 접종 시작한다...내달 11일까지

모더나 BA.1 기반 2가 백신 우선 활용 60대 이상·요양병원 입소자 등 1순위

오미크론 변이(BA.1) 대응 능력이 있는 개량 백신 접종이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1일 국내외 백신 개발·허가 동향,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변이 대응 능력이 있는 2가백신을 접종한다.

지난 15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의 BA.1 기반 2가 백신을 먼저 활용하고, 화이자의 BA.1 기반 2가 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모더나의 BA.1 기반 2가백신은 코로나19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2가지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mRNA 백신이다.

임상 결과 BA.1 기반 2가백신은 기존 백신 대비 초기주(초기바이러스)에 1.22배, BA.1에는 1.75배 더 높은 중화능을 보였다. 최근 유행하는 BA.4

와 BA.5에는 기존백신 대비 1.69배 높은 중화능이 확인됐다.

또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시 기존 백신 대비 증상 유형은 유사하나 발생 빈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소 이상반응으로 통증(77%)과 겨드랑이 부기(17%) 등이, 전신 이상반응으로는 피로감(55%), 두통(44%) 등이 관찰됐다.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나 스카이코비원 등 단백질 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모더나의 2가백신은 식약처 품목 허가에 따라 18세 이상 기초접종(1·2차)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접종 차수에 관계없이 2가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이 권고된다. 4차 접종을 받은 후 4개월이 지났다면 추가적으로 2가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정부는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적으

로 보호하기 위해 10월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1순위 접종군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2순위 대상군인 ▲50대 및 18~49세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도 접종을 권고한다. 군 입영장병이나 교정시설 입소자 등 집단시설의 접종도 허용한다. 3순위 대상군인 18~49세 성인의 경우에도 권고는 아니지만 허용은 된다.

백경란 단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과 건강 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사전예약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접종과 당일접종 모두 10월11일부터 시행된다.

사전예약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ncvr.kdca.go.kr)에서 할 수 있다. 고령층은 가족의 대리예약이나 1339 또는 지자체 콜센터 등을 통한 전화예약도 가능하다.

당일접종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SNS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당일접종의 경우, 2·3순위 접종군인 40대 이

하 일반 성인도 기초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면 맞을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 방문접종팀 등이 해당 시설에 방문해 접종을 시행한다.

정부는 백신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2·3순위 접종대상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순위 접종 진행상황이 감소세에 접어들면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백 단장은 설명했다. 추진단은 접종 4개월 경과 고령층 등 1순위 접종군은 약 13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백신이 활용되는 만큼 이상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10월11일부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문제 여부를 확인한다. 접종자 전원에 대해 접종 이후 3일차에 주의사항을 재차 안내한다.

백 단장은 "국내외 접종 효과성과 안전성 근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양한 경로로 안내드리고, 의료계와 함께 접종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전남병무청, 제31사단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광주전남병무청은 20일 육군 제31보병사단(광주 북구 소재)에서 입영장경과 동반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이슬비기자



해양경찰교육원, 한국해양대생 대상 해양안전체험 실시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완도해경, "해양경찰의 날"기념행사 개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15일 오전 청사 3층 강당에서 '제69주년 해양경찰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벌 쏘임 사고' 대비 행동요령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벌초·성묘와 가을 산행으로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요령 안내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한다고 19일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진도경찰, 노인대학 교통안전교육 실시

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최근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에 방문하여 진도노인대학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조상용기자



나주경찰, PM(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20일 나주시 백호문화관에서 나주 초·중·고등학교 52명을 대상으로 가장 안전한 나주를 위한 PM(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추락·끼임' 사망 10월 최다...76%는 영세 사업장서 발생

고용부, 5년간 건설·제조업 3대 안전조치 사망 분석

최근 5년간 산업 현장에서 '추락·끼임' 등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10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4명 중 3명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제조업의 3대 안전조치 관련 사망자는 10월이 총 165명으로 가장 많았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이는 같은 기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월평균 사망자 수(138명)보다 19.6%(27명) 많은 것이다. 하루 평균으로도 10월이 1.06명으로, 다른 달의 하루 평균(0.91명)보다 많았다.

10월에 안전조치 관련 사망 사고가 많은 것은 개천절과 한글날 등 연휴 속에서 긴장이 풀리며 기본적

인 안전수칙 소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도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10월 사망자 165명 중 126명(76.4%)은 상시 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중소 사업장에 집중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이유"라며 "앞으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방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를 작업 유형별로 보면 지붕 공사 중 추락이 25명으로, 월평균(16.7명)보다 49.7%(8.3명) 많았다. 채광장, 슬레이트 등 가을철 지붕을 수리하는 작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지붕 위 안전덮개와 안전 블록을 최대 3000만원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지붕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 사업장 1500여곳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체

점검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장 내에서 향후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산재를 명확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하게 수립,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이슬기자



가을과 코스모스

원만한 가을 날씨를 보인 21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공터에 코스모스가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 변호 기록 법원 재판부에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이 과거 공판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변호한 해당 사건의 공판 기록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당시 이 전 지사)가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고 혼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난 6월9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이 대표와 소송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 측 이병철 변호사는 당시 "이 대표가 인권변호사로서 합당한 변론을 한 것이지,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 것인지 입증하려 한다"며 과거 공판 기록 등 문서 송부 촉탁 신청과 함께 이 의원 측 입장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